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대전시의 대응방안

연구진 최길수(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영선(대전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2008.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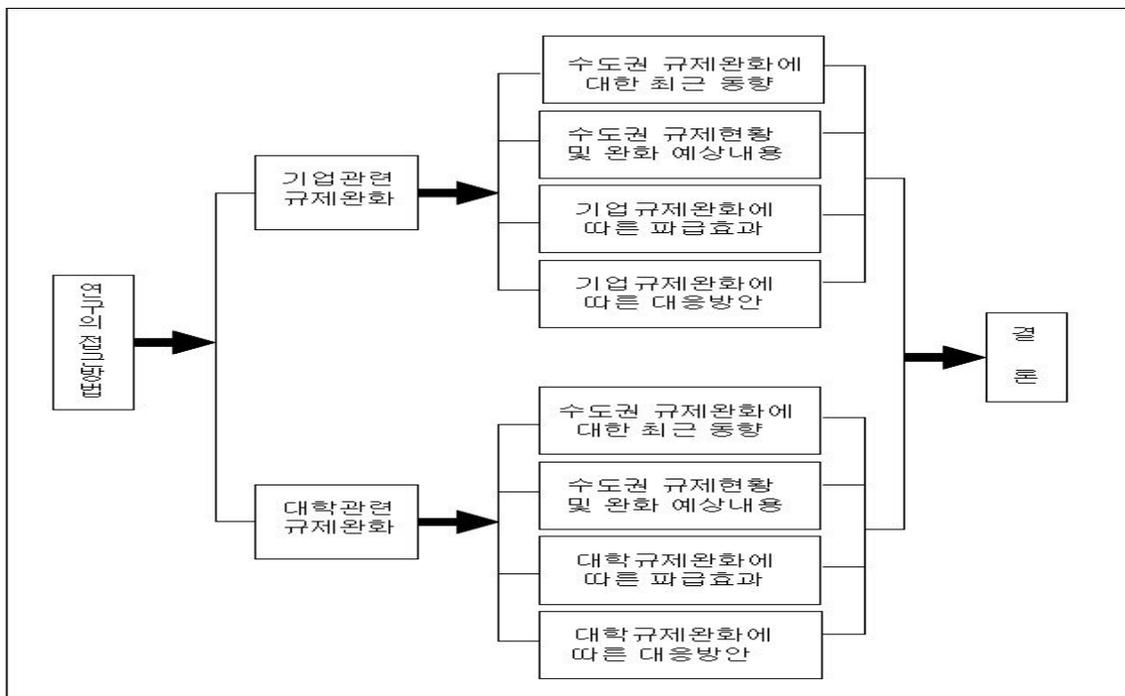
<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및 접근방법 | 1 |
| II. 기업관련 수도권규제 완화 | 2 |
| 1. 최근동향 | 2 |
| 2. 규제현황 및 규제완화 예상내용 | 5 |
| 3. 규제완화에 따른 파급효과 | 7 |
| 4. 규제완화에 다른 대응방안 | 16 |
| III. 대학관련 규제완화 | 21 |
| 1. 최근동향 | 21 |
| 2. 규제현황 및 규제완화 예상내용 | 24 |
| 3. 규제완화에 따른 파급효과 | 25 |
| 4. 규제완화에 다른 대응방안 | 28 |
| IV. 결론 | 30 |

I. 문제제기 및 접근방법

- 실용경제를 표방하는 새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뜻을 밝히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가 기정사실화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전시의 파급효과 분석과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
- 따라서 본 연구는 장차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치화 되거나 단행될 경우, 그 여파가 대전지역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범시민적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업관련 규제완화와 대학관련 규제완화로 나누어, 이에 관한 최근의 동향과 현재의 규제현황 및 규제완화 예상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전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그림 1> 참조)

<그림 1> 연구의 접근방법



II. 기업관련 수도권 규제완화

1. 최근동향

□ 기업관련 수도권 규제완화 및 정책관련 최근동향

-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규제의 내용은 크게 수도권규제(기업규제, 대학 규제), 상수원규제, 군사지역규제, 그린벨트규제, 그리고 농지규제 등이며, 이중 최근에 주요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수도권 규제를 유지할 것인가와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임

<표 1> 수도권 규제완화 및 정책관련 최근 동향

| 2005년도 | |
|--------|---|
| 1월 | ○수도권발전전략 연구발표(국가균형발전위원회) |
| 3월 | ○수도권발전기획단 설치(국무총리실) |
| 5월 25일 |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산업 공장 신·증설 3년 연장 |
| 6월 27일 | ○수도권발전종합대책 발표 |
| 11월 4일 | ○수도권 내 국내 대기업 첨단 8개 업종 공장 신설 허용 |
| 12월 3일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 공청회 개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 -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발의 |
| 2006년도 | |
| 1월 |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효과 보고서(노사정위원회 제조업발전특위) ○수도권 규제의 재인식 보고서(한국경제연구원, 전경련) |
| 2월 9일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국회통과 -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
| 6월 4일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 규모 완화 ○산업집적화 활성화법 개정 -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 면적 기준 완화 |
| 6월 30일 |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 12월 | ○성장관리권역 내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확대 - LG전자, 팬택,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 4개 대기업의 증설 허용 |

| 2007년도 | |
|----------|---|
| 2007년 2월 |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부지 면적 확대 추진 -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 불허 |

| 2008년도 | |
|--------|--|
| 2월 5일 | ○192개 국정과제로 규제합리화 발표 - '활기찬 시장경제' 국정지표의 중점과제 |
| 2월 12일 | ○경기도, 수도권 규제개선 단계별 추진 방침 발표 - 1단계(2.25~4.9) : 정비발전지구 도입, 미군공여 구역지원특별법 개정 등 - 2단계(4.10~5.29) : 첨단 대기업 신증설 확대,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개정 등 |
| 2월 14일 | ○국회(건교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심의 - 정비발전지구 도입 |
| 3월 21일 | ○환경부업무보고: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입지규제 이격거리 조정 - 공장입지규제지역을 기존(광역상수원 20km, 지방상수원 15km 이하, 취수장 7km 이내) -> 취수장 7km 이내로 조정 |

□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동향

- 신자유주의 입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균형 발전(군사시설 보호구역, 접경지역, 서해안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낙후지역)을 주장
 - 경기도지사, 경기개발연구원, 경제학회, 전경련, 공정거래위원회, 일부언론 등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여론을 형성해 나가고 있음
 - 이러한 수도권 중심의 움직임은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 시책에 의하여 더욱 더 탄력을 받음

- “광역경제권과 대수도론 전략은 일치한다.”는 논리로 광역경제권의 추진 이 곧 수도권 규제완화를 연결시키려는 전략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음

□ 비수도권 지역의 대응동향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도권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으며,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업도시건설, 혁신도시건설 등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으로 수도권 규제철폐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음
- 그나마 남아 있는 마지막 수도권 규제들이 완화되어 수도권의 과밀집중현상과 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비용 부담, 지역 간 격차 등 부작용의 유발을 걱정
 - 최근(3월4일-21일) 동아일보가 “이명박시대의 지방자치”라는 제목하의 보도에서 16개 시도지사 중 비수도권 지역의 시도지사는 하나같이 새정부에 들어서 본격화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새 정부의 정책과제인 규제합리화에 대해 일반적 규제완화는 동의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통상의 규제완화와는 별개로 다루어 주기를 바라면서 그 추이와 대응방안 마련에 촉각

□ 대전광역시의 대응동향

-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경제 및 발전에 미치는 과급효과와 상생발전방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존의 균형발전정책들의 추이와 대응방안 모색
 -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 등 지역발전정책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방안 및 추진전략 연구
-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비한 기업과 인재의 유치 및 유입 촉진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2. 규제현황 및 규제완화 예상내용

□ 기업관련 수도권 규제현황

<표 2> 수도권 권역별 규제현황

| 구 분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
| 대형건축물 | 과밀부담금 부과 (서울시에 한함) | 규제 없음 | 금지 |
| 공공청사 | 심의+과밀부담금 (서울시) | 심의 후 허용 | 심의 후 허용 |
| 연수시설 | 금지 | - '94.4.30 이전 · 기존시설 증축: 20% 이내 허용 · 신축: 심의 후 허용 | - '94.4.30 이전 · 기존시설의 10%이내 증축만 허용 |
| 공장규제 | - 대기업: 신·증설 금지 - 중소기업 · 산업단지: 업종규모 제한 없음 · 공업지역: 도시형 공장 허용 · 기타지역: 현지 근린 공장, 첨단업종, 봉제, 종이제품 제조공장 허용 | - 대기업: 신·증설 금지 (아산국가공단은 제외) · 반도체 등 14개 첨단 공장 100% 증설 허용 · 해외투자비율이 50% 이상인 25개 첨단업종에 한해 '07년 말까지 신 증설 허용 - 중소기업: 제한 없음 | - 대기업: 신·증설 금지 - 중소기업 · 공업지역: 도시형공장 · 기타지역: 물을 사용하지 않는 도시형 공장 |
| 공업지역 지정 | 위치변경만 허용 |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된 공업지역 허용 | - |
| 택지 조성 | 100만m ² 이상 심의 후 허용 | 100만m ² 이상 심의 후 허용 | - 오염총량제 시행 · 도시지역: 10만m ² 이상 심의 후 허용 · 비도시지역: 10만m ² 이상 50만m ² 이내 심의 후 허용 - 오염총량제 미시행 · 3만-6만m ² 이하 심의 후 허용 |
| 공업용지 조성 | 30만m ² 이상 심의 후 허용 | 30만m ² 이상 심의 후 허용 | 3만-6만m ² 이하 심의 후 허용 |
| 관광지 조성 | 10만m ² 이상 심의 후 허용 | 10만m ² 이상 심의 후 허용 | 3만-6만m ² 이하 심의 후 허용 |

자료 : 건설교통부

<표 3> 수도권 공장입지 주요정책

| 구 분 | 규제내용 |
|--------------|---|
| 공장건축 총량제 | - 개별입지(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 포함)의 공장 건축 시 시도별 총량에 대한 규제 - 매 3년간 수도권 허용 공장건축총량 설정 - 평택시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 의해 별도로 공장총량 설정 - 미군공여기지특별법에 의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예외 |
| 공장입지 규제 | - 권역별, 공장규모별, 지역특성별, 업종별 공장의 신설, 증설, 용도변경 규제 |
| 공업지역 지정 | -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공업지역 지정 면적 규제 · 산업단지(산업입지법), 공업지역(국토계획법), 산업별 개발진흥지구(국토계획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 3만m 이상의 공업용지 면적을 말함 |
| 공장용지 조성사업 | - 권역별, 규모별 심의 및 허용대상 규정 |

자료 : 건설교통부

□ 규제완화 예상내용

○ 수도권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완화

- 공장건축총량제, 공장입지규제, 공업지역규제,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입지 규제 완화
- 첨단업종 기업(공장)에 대한 신·증설 허용 등의 규제완화
 - 수도권 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신설 및 매입 허용
 - 수도권 내 첨단업종 신·증설시 면적제한 완화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 수도권 내 25개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한시허용에서 전면허용으로 변경
-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입지규제 이격거리 조정(환경부업무보고)
 - 공장입지규제지역을 기존(광역상수원 20km, 지방상수원 15km 이하, 취수장 7km 이내) -> 취수장 7km 이내로 조정

○ 조세 및 부담금 완화

- 수도권 내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세정책(중과세 등) 폐지
- 수도권에만 부과되는 부담금(과밀, 농지보전 등) 감면 또는 폐지

○ 환경규제 완화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로 구리배출농도 9ppb 이하로 처리하는 수질 오염 방지시설의 입지 허용(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중 구리 제외(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 수도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차별적 지원
 - 대기질 개선 국비(08년): 서울 550억, 인천 490억, 경기 1,055억, 대전 47억
 - 노후차량조기폐차비(대당 100~600만원 지원): 수도권만 특별 국비 지원

3. 규제완화에 따른 파급효과

□ 현 황

○ 인구수

-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3개 시도가 차지하고 있는 인구규모는 대체적으로 48%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대전의 인구규모는 전체에서 약 3%를 차지함
- 전체적으로 인구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가율이 크지 않으며, 대전의 인구증가 비율은 약 1%로 분석되고 있음

<표 4> 인구수(주민등록인구 기준)

|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 전국(%) | 48,782,274명(100) | 48,991,779명(100) | 49,268,928명(100) |
| 수도권(%) | 23,465,054명(48) | 23,711,590명(48) | 23,963,497명(48) |
| 대전(%) | 1,454,638명(3) | 1,466,158명(3) | 1,475,659명(3) |

자료: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

- 대전시 경제 활동인구는 70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69만 2000명)보다 1만 7000명이 늘고 취업자는 68만 명으로 전년 동월 66만1000명보다 1만 9000명이 증가한 반면, 실업자는 2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3만 1000명에 비해 2000명이 감소함

<표5> 경제활동인구

| 구 분 | 2005 | | | 2006 | | | 2007 | | |
|-------------|--------|--------|-------|--------|--------|-------|--------|--------|-------|
| | 전국 | 수도권 | 대전시 | 전국 | 수도권 | 대전시 | 전국 | 수도권 | 대전시 |
| 15세이상인구(천명) | 38,300 | 18,544 | 1,154 | 38,762 | 18,908 | 1,174 | 39,170 | 19,290 | 1,195 |
| 경제활동인구(천명) | 23,743 | 11,642 | 676 | 23,978 | 11,845 | 692 | 24,216 | 12,044 | 709 |
| 취업자(천명) | 22,856 | 11,135 | 646 | 23,151 | 11,363 | 661 | 23,433 | 11,596 | 680 |
| 실업자(천명) | 887 | 508 | 30 | 827 | 483 | 31 | 783 | 448 | 29 |
| 비경제활동인구(천명) | 14,557 | 6,901 | 478 | 14,784 | 7,062 | 483 | 14,954 | 7,247 | 485 |

자료 : 통계청

○ 공장규모 현황

- 대전시의 공장규모는 제주(0.4%)를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를 차지함(※ 서울 8.8%, 부산 6.8%, 대구 4.3%, 인천 7.3%, 광주 1.8%, 울산 1.3%, 경기 33.6%, 강원 1.7%, 충북 4.2%, 충남 4.7%, 전북 3.2%, 전남 3.3%, 경북 7.7%, 경남 3.7%)

<표 6> 공장규모 현황(2005년)

| 구분 | 공장수(개사) | | |
|-----|---------|--------|-------------|
| | 전국 | 수도권 | 대전시 |
| 규모별 | | | |
| 계 | 110,352 | 54,847 | 1,270(1.2%) |
| 대기업 | 1,294 | 355 | 23(1.8%) |
| 중기업 | 6,962 | 3,098 | 87(1.2%) |
| 소기업 | 102,096 | 51,394 | 1,160(1.1%) |

자료 : 통계청

○ 사업체 현황

- 대전시는 서비스업이 매우 발달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분야에 특화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표 7> 사업체 구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6년)

| 구 분 | 사업체수(개) | | | 종사자수(명) | | |
|--------------------|-----------|-----------|--------|------------|-----------|---------|
| | 전국 | 수도권 | 대전시 | 전국 | 수도권 | 대전시 |
| 산업별 | | | | | | |
| 전산업 | 3,226,569 | 1,507,958 | 89,851 | 15,435,766 | 7,804,537 | 412,889 |
| 농업 및 임업 | 1,864 | 197 | 11 | 25,708 | 3,859 | 222 |
| 어업 | 370 | 15 | - | 6,021 | 344 | - |
| 광업 | 1,839 | 192 | 7 | 18,466 | 3,189 | 48 |
| 제조업 | 340,724 | 176,707 | 6,563 | 3,435,491 | 1,668,756 | 47,206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1,551 | 473 | 31 | 67,418 | 26,183 | 2,295 |
| 건설업 | 90,486 | 40,679 | 2,368 | 845,339 | 412,518 | 21,427 |
| 도매 및 소매업 | 865,358 | 399,305 | 24,857 | 2,468,173 | 1,282,154 | 71,290 |
| 숙박 및 음식점업 | 618,301 | 257,687 | 17,017 | 1,661,782 | 775,840 | 46,408 |
| 운수업 | 343,598 | 179,059 | 9,886 | 879,553 | 454,245 | 25,008 |
| 통신업 | 9,424 | 3,739 | 273 | 140,178 | 73,491 | 3,989 |
| 금융 및 보험업 | 35,613 | 15,651 | 1,069 | 619,539 | 333,425 | 18,139 |
| 부동산 및 임대업 | 120,299 | 73,984 | 3,355 | 415,679 | 262,022 | 12,684 |
| 사업서비스업 | 90,909 | 52,984 | 2,688 | 1,175,867 | 807,961 | 43,032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2,396 | 3,476 | 256 | 538,799 | 218,424 | 19,785 |
| 교육 서비스업 | 132,916 | 56,686 | 4,005 | 1,245,864 | 573,064 | 43,043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79,868 | 38,709 | 2,735 | 696,150 | 332,914 | 23,690 |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123,641 | 58,759 | 3,789 | 376,990 | 199,297 | 10,091 |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357,412 | 149,656 | 10,941 | 818,749 | 376,851 | 24,532 |

자료 : 통계청

□ 파급효과

○ 기업투자환경 측면

- 한국경제연구원의 2005년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가 16개 시·도 중 기업투자환경이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4> 기업투자환경 종합지수 분석결과

| 구분 | 기초투자 환경 | | 정보화· 기술환경 | | 인프라· 사업환경 | | 지방정부 정책환경 | | 종합순위 | |
|------|---------|----|-----------|----|-----------|----|-----------|----|--------|----|
| 서울시 | 0.1597 | 3 | 0.1901 | 1 | 0.2245 | 1 | 0.0697 | 11 | 0.6440 | 1 |
| 부산시 | 0.1580 | 4 | 0.0843 | 4 | 0.1763 | 2 | 0.0922 | 6 | 0.5108 | 4 |
| 대구시 | 0.1476 | 9 | 0.0719 | 6 | 0.1307 | 7 | 0.0663 | 12 | 0.4165 | 7 |
| 인천시 | 0.1548 | 5 | 0.0833 | 5 | 0.1576 | 3 | 0.1114 | 2 | 0.5071 | 5 |
| 광주시 | 0.1385 | 10 | 0.0659 | 7 | 0.1191 | 9 | 0.0915 | 7 | 0.4150 | 8 |
| 대전시 | 0.1633 | 2 | 0.1501 | 2 | 0.1409 | 5 | 0.1057 | 3 | 0.5600 | 2 |
| 울산시 | 0.1509 | 6 | 0.0553 | 9 | 0.1413 | 4 | 0.0643 | 13 | 0.4118 | 9 |
| 경기도 | 0.1712 | 1 | 0.1194 | 3 | 0.1384 | 6 | 0.0961 | 5 | 0.5251 | 3 |
| 강원도 | 0.1285 | 13 | 0.0292 | 14 | 0.0567 | 16 | 0.0734 | 10 | 0.2878 | 16 |
| 충청북도 | 0.1329 | 12 | 0.0437 | 11 | 0.0741 | 15 | 0.0628 | 14 | 0.3135 | 14 |
| 충청남도 | 0.1500 | 7 | 0.0514 | 10 | 0.0924 | 12 | 0.1126 | 1 | 0.4064 | 10 |
| 전라북도 | 0.1100 | 16 | 0.0344 | 13 | 0.0850 | 14 | 0.0587 | 15 | 0.2881 | 15 |
| 전라남도 | 0.1280 | 14 | 0.0212 | 16 | 0.0908 | 13 | 0.0802 | 9 | 0.3202 | 13 |
| 경상북도 | 0.1483 | 8 | 0.0358 | 12 | 0.1039 | 11 | 0.0545 | 16 | 0.3425 | 12 |
| 경상남도 | 0.1359 | 11 | 0.0626 | 8 | 0.1274 | 8 | 0.0909 | 8 | 0.4168 | 6 |
| 제주도 | 0.1276 | 15 | 0.0239 | 15 | 0.1094 | 10 | 0.1051 | 4 | 0.3660 | 11 |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2005)

- 이 분석을 토대로 16개 시도별로 기업투자환경의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을 분석하여 보고하였는데, 그 중 수도권과 대전시의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을 요약하여 재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5> 개별 지자체별 투자환경의 강점요인과 약점요인

| 구분 | 수도권 | | 대전시 | |
|----------|---|--|---|--|
| | 강점요인 | 약점요인 | 강점요인 | 약점요인 |
| 정량 변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이용자수 - GRDP 중 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소/사업체 수 - 전체기업체수 중 운수업체 수 비중 - 교육·문화·보건·주택·지역 개발비중 - 정책자금 대출액/예금액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용토지 공시지가 - 교원수/전체 인구수 - 대학생 수 비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수 비중 - 정보처리·컴퓨터 운영 종사자 수 - GRDP 중 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소/사업체 수 - 인구대비 특허출원건수 - 도로 길이 - 의료인력 수/시·도 인구 - 시도별 지역개발비/경제개발 비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금 대출액/예금액 비율 |
| 정성 변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금 대출절차 편리성 - 정책자금 활용 용이성 - 노동력의 질 - 노사관계 안정성 - 생산필요인력 채용 용이성 - 기업간 정보네트워크구축정도 - 전자상거래 활발 정도 - 정보인프라구축에 드는 비용 - 산·학 기술협력 정도 - 지역대학의 기술개발역량의 보유정도 - 고급 인력 채용 용이성 - 물류인프라 확충 정도 - 편의시설 확보 정도 - 대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간 협력정도 - 동종업종의 집적단지 발달 정도 - 행정처리 속도 - 항만접근성 - 공항접근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관련 준조세부담 적은 정도 - 기업규제가 적은 정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관계 안정성 - 생산필요인력 채용 용이성 - 교육기관의 교육의 질 - 기업간 정보네트워크 구축 정도 - 전자상거래 활발 정도 - 정보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 - 산·학 기술 협력 정도 - 지역대학의 기술개발역량의 보유정도 - 지역주민의 기업에 대한 태도 - 지역 관련 준조세 부담 적은 정도 - 기업창업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의 양이 적은 정도 - 기업규제가 적은 정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접근성 - 공항접근성 |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2005년)

- 수도권 투자환경의 약점요인들로는 대부분 규제에 따른 토지이용, 조세, 대학생의 비중 등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이러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의 기업투자환경은 더욱 좋아져 기업투자가 수도권으로 더욱 집중될 것임

- 즉, 수도권외의 약점요인이 강점요인으로 전환되고 그 대신 현재 대전시의 강점요인이 약세화 될 우려가 큼
- 이에 따라 대전시의 기업투자환경은 지금의 순위에서 밀려나 수도권으로부터 기업투자를 빼앗겨 결국 기업투자의 규모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분석됨

○ 인구유출 측면

- 대전지역은 지속적인 전입초과를 나타내다 2007년 처음 전출초과 (-1,048 명)를 나타냄

<표 6> 시도별 총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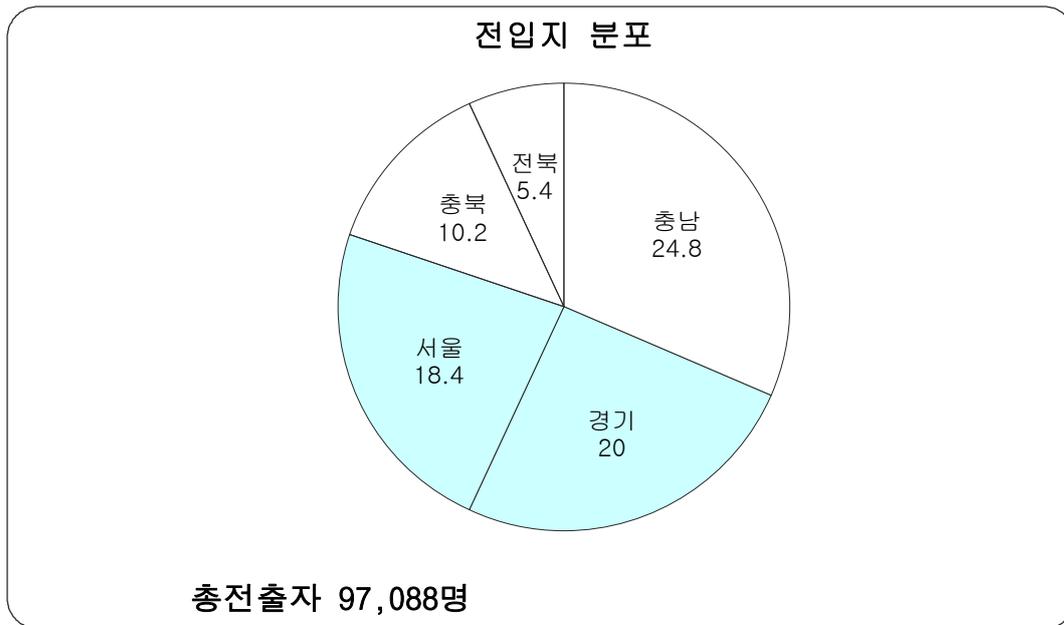
(단위 : 천명, %)

| 시도 | 총 이동 | | | | | |
|----|-------|-------|------|-------|-------|------|
| | 2006년 | | | 2007년 | | |
| | 전입 | 전출 | 순이동 | 전입 | 전출 | 순이동 |
| 전국 | 9,342 | 9,342 | 0 | 9,070 | 9,070 | 0 |
| 서울 | 2,174 | 2,210 | - 37 | 2,078 | 2,131 | - 53 |
| 부산 | 560 | 595 | - 35 | 529 | 565 | - 36 |
| 대구 | 428 | 454 | - 26 | 400 | 416 | - 17 |
| 인천 | 523 | 514 | 10 | 577 | 554 | 23 |
| 광주 | 301 | 304 | - 3 | 286 | 290 | - 4 |
| 대전 | 295 | 292 | 2 | 283 | 284 | - 1 |
| 울산 | 174 | 177 | - 2 | 180 | 181 | - 1 |
| 경기 | 2,460 | 2,321 | 139 | 2,307 | 2,194 | 113 |
| 강원 | 255 | 264 | - 10 | 245 | 251 | - 6 |
| 충북 | 246 | 244 | 2 | 253 | 248 | 6 |
| 충남 | 337 | 330 | 7 | 355 | 342 | 13 |
| 전북 | 327 | 346 | - 19 | 333 | 344 | - 11 |
| 전남 | 284 | 309 | - 25 | 287 | 304 | - 17 |
| 경북 | 391 | 395 | - 3 | 381 | 396 | - 15 |
| 경남 | 497 | 495 | 1 | 492 | 484 | 8 |
| 제주 | 89 | 91 | - 2 | 83 | 86 | - 3 |

자료 : 통계청

- 대전에서 전출하는 지역으로는 충남지역, 경기도, 서울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 대전시 전출자의 전입지 분포(%)



- 대전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전입초과를 보이거나 약간의 전출초과를 나타내는 반면, 20대 연령층에서는 큰 전출효과를 보임
-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중 20대 연령층이 전체 순이동의 35.8%를 차지하고 있어, 고등학교 우수 졸업자들이 수도권으로 대학진학을 하거나 대학 졸업자들이 수도권으로 취업을 위해 대거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됨
- 수도권 규제완화 이전에도 상황이 이러한데,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되면 대전시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하는 인구의 수는 매우 증가할 것이고 특히 20대 연령층의 수도권으로의 전입현상은 심각해 질 것임
- 이것은 대전시의 인구감소와 인재 채용율 감소로 이어져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20대-30대의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됨(<표 7>과 <표 8> 참조)

<표 7> 수도권외의 연령계층별 순이동(전입-전출)

(단위 : 천명, %)

| 연령 | 수도권으로 전입 | | | | | 수도권에서 전출 | | | | | 순이동 (전입-전출) | |
|--------|----------|------|-------|-----|------|----------|------|-------|-----|------|----------------|------|
| | 2006 | 2007 | 전년대비 | | | 2006 | 2007 | 전년대비 | | | 2006 | 2007 |
| | | | 구성비 | 증감 | 증감률 | | | 구성비 | 증감 | 증감률 | | |
| 계 | 586 | 579 | 100.0 | - 8 | -1.3 | 475 | 496 | 100.0 | 21 | 4.4 | 112 | 83 |
| 0-9세 | 57 | 52 | 9.0 | - 5 | -8.7 | 57 | 55 | 11.0 | - 2 | -3.4 | 0 | - 3 |
| 10-19세 | 49 | 48 | 8.3 | - 1 | -1.4 | 37 | 40 | 8.0 | 3 | 8.3 | 12 | 8 |
| 20-29세 | 212 | 207 | 35.8 | - 5 | -2.5 | 128 | 132 | 26.6 | 4 | 3.0 | 84 | 75 |
| 30-39세 | 116 | 112 | 19.4 | - 3 | -3.0 | 109 | 110 | 22.3 | 2 | 1.5 | 7 | 2 |
| 40-49세 | 62 | 61 | 10.6 | - 1 | -1.1 | 60 | 63 | 12.7 | 3 | 4.2 | 2 | - 1 |
| 50-59세 | 35 | 38 | 6.5 | 2 | 6.6 | 35 | 39 | 7.9 | 4 | 10.3 | 0 | - 1 |
| 60세이상 | 55 | 60 | 10.4 | 5 | 8.6 | 49 | 57 | 11.5 | 8 | 16.6 | 6 | 3 |

자료: 통계청

주) 순이동 = 13개 시도에서 수도권으로 전입 - 수도권에서 13개 시도로 전출

<표 8> 대전시 전출자의 연령별 분포(2006년)

(단위 : 명)

| 구분 | 전입지별 | |
|----------|-------------|------------|
| | 전국 | 수도권 |
| 계 | 292,499 | 40,476 |
| 15 - 19세 | 15,248(5%) | 1,681(4%) |
| 20 - 24세 | 26,567(9%) | 4,912(12%) |
| 25 - 29세 | 41,927(14%) | 8,069(20%) |
| 30 - 34세 | 38,045(13%) | 5,556(14%) |
| 35 - 39세 | 29,570(10%) | 3,998(10%) |

자료 : 통계청

○ 산업의 측면

- <표 9>은 16개 시도별로 제조업 내 22개 업종별 입지상계수와 경쟁력지수를 산출하여 밀집업종과 경쟁력 우위업종을 도출한 보고서에서 수도권과 충청권만을 재정리한 것임
- 이 표에서는 대전광역시의 밀집업종이면서 경쟁력 우위업종으로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음식료품,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수도권의 밀집업종 및 경쟁력 우위업종과 중복된 것들임 (중소기업청, 2005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분석)
- 따라서 제조업에 취약한 조건을 가진 대전시에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밀집업종과 경쟁력 우위업종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경쟁력이 상실될 것임

<표 9> 수도권-충청권 밀집업종 및 경쟁력 우위업종

A. 수도권

| 시도별 | 밀집업종(A) | 경쟁력우위업종(B) | A∩B |
|-------|--|--|---|
| 서울특별시 | 의복 및 모피제품/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가죽·가방 및 신발/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섬유제품/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부품/가구 및 기타제품 | 섬유제품/비금속광물제품/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부품의복 및 모피제품/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 의복 및 모피제품/섬유제품/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부품 |
| 인천광역시 |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및 기타제품/가구 및 기타제품/기타 기계 및 장비/재생용 가공원료 조립금속제품/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부품/음식료품/컴퓨터 및 사무용기기/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1차 금속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 가죽·가방 및 신발/음식료품 기타운송장비/목재 및 나무제품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가구 및 기타제품/재생용 가공원료/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 음식료품/목재 및 나무제품/컴퓨터 및 사무용기기/가구 및 기타제품/재생용가공원료/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
| 경기도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가구 및 기타제품/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부품/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가죽·가방 및 신발/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기타 기계 및 장비/조립금속제품/재생용 가공원료 | 가죽·가방 및 신발/기타 운송장비/제1차 금속산업/ 의료·정밀·광학 및 시계/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음식료품/가구 및 기타제품/재생용 가공원료 | 가죽·가방 및 신발/ 의료·정밀·광학 및 시계/가구 및 기타제품 재생용 가공원료 |

B. 충청권

| 시도별 | 밀집업종(A) | 경쟁력우위업종(B) | A∩B |
|-------|---|--|--|
| 대전광역시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화합물 및 화학제품/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음식료품/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기타 운송장비/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금속제품/화합물 및 화학제품/비금속광물제품/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음식료품/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화합물 및 화학제품/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음식료품/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
| 충청남도 | 음식료품/자동차 및 트레일러 비금속 광물제품/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화합물 및 화학제품/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재생용 가공원료 | 가구 및 기타제품/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기타운송장비 조립금속제품/펄프·종이 및 종이제품/가죽·가방 및 신발/재생용 가공원료/섬유제품/기타 기계 및 장비/음식료품/제1차 금속산업/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의복 및 모피제품/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부품/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화합물 및 화학제품/자동차 및 트레일러 | 음식료품/자동차 및 트레일러/ 비금속 광물제품/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화합물 및 화학제품/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재생용 가공원료 |
| 충청북도 | 음식료품/비금속광물제품/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펄프·종이 및 종이제품/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화합물 및 화학제품 | 가죽·가방 및 신발/기타 운송장비/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기타 기계 및 장비/펄프·종이 및 종이제품/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음식료품/제1차 금속산업 섬유제품/자동차 및 트레일러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음식료품 |

4. 규제완화에 따른 대응방안

□ 합리적인 논리개발

- 현행 공장입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유지 또는 강화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 공장입지 규제완화는 지방의 성장동력산업 및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 지역특화발전전략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방의 존립 기반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
 - 공장입지 규제완화를 할 경우, 수도권은 매년 5.7km²의 공장부지 면적 확

- 대, 연간 수도권 총생산액 16조 3천억, 부가가치액 7조 7천억 증가, 제조업 생산액 10조 7천억, 부가가치액 5조 2천억 증가 예상
- 첨단업종 기업(공장)에 대한 신·증설 허용 등의 규제완화를 할 경우, 이에 의한 인구집중과 수도권의 산업집중추세로 인구의 수도권 역유입 예상
 - 구체적으로 25개 첨단 분야 업체의 수도권 비중이 64.1%인 현재보다 10%만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76천명의 종업원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가족을 포함한다면 20~30만 명의 인구 유입 예상
 - 공장입지 규제완화를 할 경우, 지방으로 이전했던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소재의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이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뿐 만 아니라 기업이전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 유발이 예상
- 대수도권 및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인지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의 폐해를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 전략 수립
-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정치적인 논리보다 사회 및 환경적 측면에서 악순환의 현상(규제완화->인구 및 공장집중->교통혼잡 및 환경오염->해소를 위한 예산집중->환경개선->도시집중가속)을 고착시키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
- 수도권에 국가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경쟁력은 2006년 기준으로 세계 110개 도시중 27위에 불과(전국토의 약 11%에 불과한 수도권이 GRDP의 43%를 생산)

□ 국가차원의 인프라확충 촉구

- 중추관리기능과 생산기지가 점차 통합되는 가운데, 지방에 대한 인프라 지원이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 산업공동화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전망됨(나중규·박성덕, 2007)
 - 과거에는 단일경제권내 수도권의 중추관리기능과 지방의 생산기능의 분업적 구조였다면, 현재는 중추관리기능과 생산기지가 점차 통합되면서 전국이 3-4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분화되고 있는 상황임
 - 이로 인해 중추관리기능이 밀집한 수도권으로의 생산기지 이동이 본격화되면서, 반대로 중추관리기능이 취약한 지방에는 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있음

- 대전지역에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하는 인프라는 청주공항을 세계적 규모로 확장하여야 하며, 공항과 대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해야 함
 - 신성장동력산업의 발달로 국제항공화물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수도권으로 이탈되고 있으며, 세계화시대에 국제관문 공항의 존재 여부는 그 지역의 발전을 좌우하는 필수 기반시설로 되고 있으며, 나중규·박성덕(2007)의 연구내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10>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수도권 주장 및 지역의 대응논리

| 수도권 주장 | 논거 | 지역대응논리 | 논거 |
|-------------------------------------|---|---|---|
| 수도권을 연계한 광역경제권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확보(대수도론) | - 환경, 도시, 교통 분야에서 지역간 협력을 통한 통합행정의 구현 - 이를 통한 베이징, 상하이, 도쿄권에 대응하는 국가경쟁력 확보 |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져 지역균형발전에 심각한 타격(대수도론에 따른 피해 급증) | - 취지는 좋으나,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가져와 오히려 국가경쟁력에 손상을 입힐 우려 - 행정도시, 공공기관이전, 기업도시 등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차원의 국책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 수도권만을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보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이자 근시안적 시각임 |

| | | | |
|--------------------------|---|--|--|
| | | | - 수도권경제력 집중에 따른 피해를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보다 우선 할 시기 |
| 수도권만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 - 수도권 규제로 인해 수도권 경쟁력 하락으로 국가경쟁력 약화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 - 세계의 여러 도시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수임 -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국가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음 | -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낳음 | - 수도권 집중의 심화문제가 오히려 국가경쟁력에 부작용을 주고 있음 - 난개발 및 과밀혼잡, 규모의 불경제 심화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증대(수조원의 교통혼잡 비용과 환경개선비용) - 부동산 비용의 엄청난 증가와 버블 심화 - 우수한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땅값이 싼 지역이 오히려 기업경쟁력 확보에 유리 -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 및 지역간 위화감 조성 |
|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이 해외로 나감 |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어 국가경쟁력에 큰 손상을 주고 있음 -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을 막아야 할 것 임 | - 수도권 규제완화는 결국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증가시켜 피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임 | - 기업의 해외이전은 구조개편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임 - 해외이전기업은 수도권 규제보다 해외시장 개척, 저렴한 비용 등에 기인 함 -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기업집중을 오히려 진작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체의 58%가 수도권에 우선투자할 의사) |
| 대기업 공장 신증설 확대 허용이 반드시 필요 | - 대기업 투자확대로 26조원의 생산유발과 20만명의 고용 유발 - 국민총생산의 2.7% 추가 - 대기업의 해외이전 방지 및 효율화를 통한 이윤 극대화 | -대기업 공장 신증설이 확대될 경우 지역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우려 | - 현재 대기업첨단 8개업종 허용에 따른 피해 - 향후 대기업 첨단 25개 업종으로 확대될 경우 대구 경북에 엄청난 피해(기업이전 및 지역민들의 상실감 등을 고려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우려됨) - 전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이득보다 피해가 오히려 더 클 것임 |
| 수도권 규제를 당장 철폐하라 | - 세계화, 개방화 속에서 수도권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규제철폐가 필수 -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수 | -공공기관이전 등 인프라가 구축되는 최소 2012년까지라도 규제완화를 늦추어 달라 | - 지역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확보에 근간 - 현 상황에서의 규제완화는 지역경제의 붕괴를 가져옴(공공기관이전 등 정부의 균형발전시책들이 가시화되는 2012년까지 최소한 현 수도권 정책을 유지할 필요) - 지역 인프라 구축에 보다 많은 지원 필요 - 지역민 스스로의 방안 모색 필요 |

□ 획기적인 지방재정확충 방안 촉구: 지방소비세의 도입

-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대전광역시의 지방세수확충 효과는 16개 시도 중에서 광주(13.8%)이어 13.2%로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전북 12.4%, 서울 12.1%, 강원 11.8%, 충북 11.3%, 전남 10.4%, 대구

10.3%, 제주 10.1%, 경북 9.5%, 충남 9.0%, 울산 9.0%, 경남 8.5%, 부산 8.2%, 인천 8.1%, 경기 8.0%)

- 특히, KTX의 개통으로 대전지역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지방 소비세가 도입되면, 지방세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대전은 서울과 1시간 생활권으로서 수도권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의 수가 많으며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고속철도 서울~대전 정기권 이용자가 2005년 13만7천명에서 2006년에는 21만5천명으로 증가(자료 : 코레일)

□ 거버넌스구축을 통한 지역산업육성운동 전개

-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일방적인 반대논리의 네거티브로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한 지방정부 및 지역민의 공동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
- 따라서, “지방정부-지역의 상공단체-시민단체-언론” 등의 경제협의체를 결성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을 통한 자생력 확보에 노력해야 함
- 이러한 협의체를 통하여 외국 기업 및 대기업의 지역유치를 위해 지방정부가 행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혁파하여야 함
- 또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업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함

□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사항 발굴

-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TF팀을 가동
- 발굴된 규제 중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즉각 조치하고, 중앙정부 관련 규제내용은 각 부처별로 건의함
- 예컨대, 대덕 R&D 특구 내의 개발제한구역이 있을 경우, 이를 특구의 명칭에 걸맞게 완전히 해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함

Ⅲ. 대학관련 규제완화

1. 최근동향

□ 수도권 대학 규제완화 및 정책관련 최근동향

<표 11> 수도권 규제완화 및 정책관련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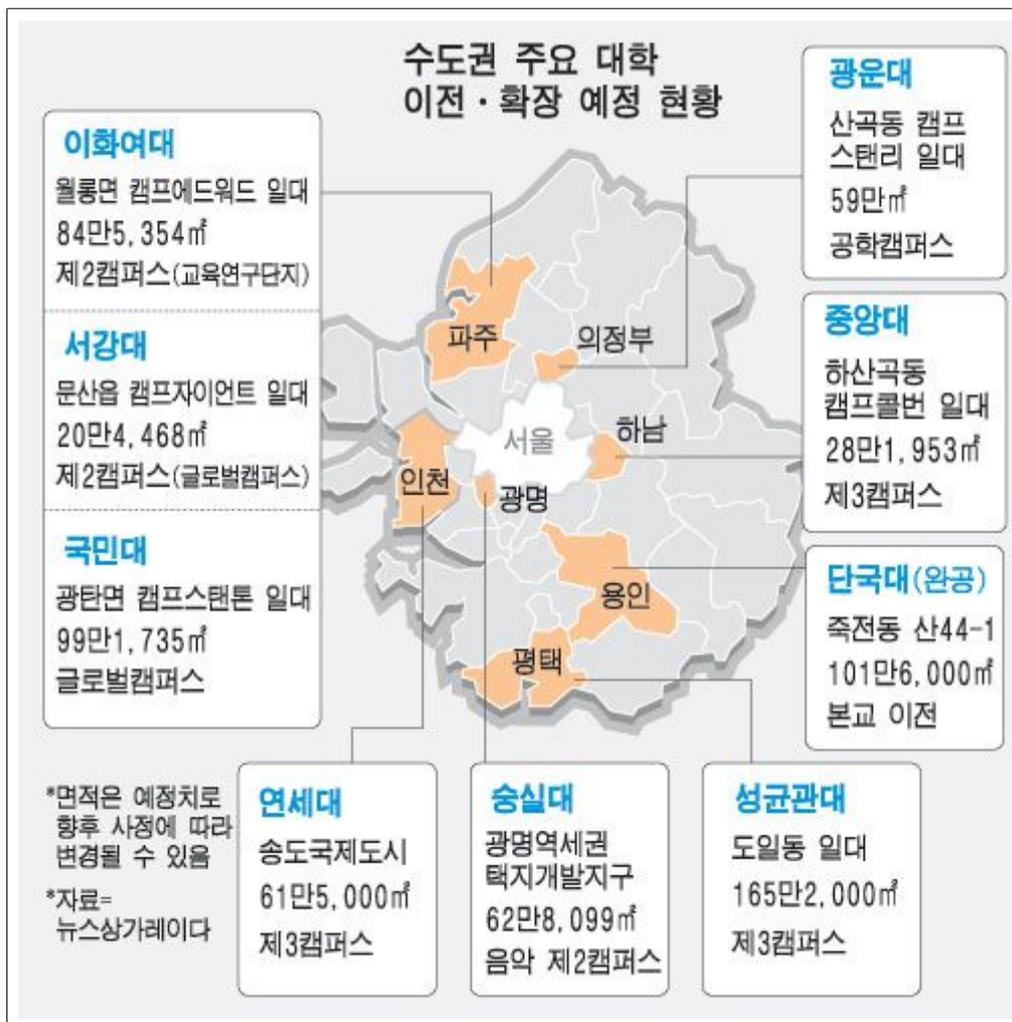
| 구분 | 수도권 규제완화 및 정책관련 내용 |
|---------------------------------|--|
| 2002년 12월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밀·성장권역 행위 제한, 총량규제 완화 |
| 2004년 12월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 · 평택시에 대학의 이전·증설과 대학총량 규제완화 · 국제화계획지구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성장권역 행위제한, 총량규제 완화 |
| 2005년 12월 1일 | -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체법안(경기도)발의 · 김문수 의원 외 49인 대체법안 발의(현재 건설교통위 계류 중) |
| 2006년 1월 3월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개정 발의 · 수도권 한나라당 의원, 대학 신·증설 제한 및 학교총량 제한 삭제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 과밀·성장권역에 대학의 이전·증설과 대학 총량규제 완화 · 지원도시사업구역(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밀·성장권역 행위 제한, 총량규제 완화 |
| 2008년 1월 7일 2월 12일 2월 14일 | - 경기도, 인수위에 수도권 규제완화 등 주요현안 10대정책 건의 · 국내대학 규제완화(신·증설 허용, 대학총량규제 폐지 등) 및 외국대학 문호 개방 - 경기도, 수도권 규제개선 단계별 추진 방침 발표 · 3단계(5. 30이후) 수정법 폐지 및 대체입법 마련,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심의 - 건교위(법안심사소위), 과밀권역 내 대학 신·증설 허용/지속심사 결정 |

□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동향

- 서울 소재 대학들이 주한미군이 반환하는 서울 외곽에 새 캠퍼스를 짓기 위해 2006년부터 해당 자치단체와 대학 간의 제 2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잇따르고 있음

- 현재 광운대(의정부 산곡동 캠프 스텐리), 중앙대(하남 하산곡동 캠프 콜번), 이화여대(파주 월릉면 캠프 에드워드) 등 9개 대학이 경기도에 새 캠퍼스 설립을 준비 중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자체들은 건의서를 통해 대학증설 허용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대폭 풀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신규 캠퍼스신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노림

<그림 3> 수도권 주요대학의 이전 및 확장 예정 현황



자료 : 매일경제, 2008년 3월 13일자

□ 비수도권 지역의 대응동향

-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있는 현재에도 비수도권의 많은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대학규제가 완화될 경우 더 큰 수의 학생 이동이 촉발될 것을 예상
-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은 원칙적으로 수도권의 대학규제 완화를 반대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집중

□ 대전시의 대응동향

- 대전시는 수도권 지역에서 내려오는 학생들의 비중이 큰 편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대학규제가 완화가 될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대학정원총량제, 로스쿨 등 대학 규제완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도출
-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완화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수도권 자치단체·대학과 공동 대처 마련

2. 규제현황 및 규제완화 예상내용

□ 수도권 대학 규제현황

<표 12> 수도권 권역별 규제현황

| 구분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
| 4년제 대학 ·교육대학 | 신설: 금지 이전: 심의 후 가능 * 서울 안으로 이전은 금지 | 신설: 금지 이전: 권역 내 또는 타권역 에서의 이전은 가능 | 신설: 금지 이전: 금지 |
| 소규모 대학 | 신설: 금지 이전: 심의 후 가능 * 서울 안으로 이전은 금지 | 신설: 심의 후 허용 이전: 권역 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 신설: 심의 후 가능 이전: 권역내 가능 |
|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 신설: 가능(대학원대학 이 외의 경우 서울은 금지) 이전: 가능 * 서울 안으로 이전은 금지 | 신설: 가능 이전: 권역 내 또는 타권역 에서의 이전은 가능 | 신설: 심의 후 가능 이전: 권역 내 가능 (산업대학 신설·이전 불가) |
| (증원) | 총량규제 - 대학·교육대학 및 입학정원 50인 이내 소규모대학(첨단학과는 100인 이 내)의 증원은 심의 후 허용 - 산업·전문대학은 전국 입학정원 총 증가수의 10%이내 허용, 10%초과는 심의 후 허용 -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인 이내 허용(첨단분야 제외), 300인 초과는 심의 후 허용 | | |
| 대학통폐합 | 대학·전문대학 통·폐합 수도권 심의를 거쳐 한시적 허용('09년 12월 말까지) | | |

자료 : 건설교통부

□ 규제완화 예상내용

- 대학의 신설 및 이전에 관한 제한을 하고 있는 입지규제 단계적 축소 및 폐지

- 대학의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입학정원 총량규제 폐지
- 현재의 수도권 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 따른 입지규제를 ‘5+2 광역경제권’으로 전환하여, 대학 신설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권역별로 관리·운영할 것으로 사료됨

3. 규제완화에 따른 파급효과

□ 현 황

- 대전시의 대학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대학교수의 4%를 차지하며 전체 학생 수의 5%를 차지함, 그 중 4년제대학은 전국의 6%, 전문대학은 전국의 4%를 차지함

<표 13> 대학현황(2006년)

| 시도별 | 계 | | 4년제대학 | | 전문대학 | |
|------|---------------|---------------------|---------------|---------------------|---------------|-------------------|
|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 전국 | 352 (100%) | 2,912,745 (100%) | 186 (100%) | 1,914,317 (100%) | 166 (100%) | 998,428 (100%) |
| 수도권 | 123 (35%) | 1,105,736 (38%) | 70 (38%) | 724,135 (38%) | 53 (32%) | 381,601 (38%) |
| 비수도권 | 229 (65%) | 1,807,009 (62%) | 116 (62%) | 1,190,182 (62%) | 113 (68%) | 616,827 (62%) |
| 대전시 | 17 (4%) | 149,080 (5%) | 11 (6%) | 113,779 (6%) | 6 (4%) | 35,301 (4%) |

자료 : 교육부

- 대전시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 성향을 살펴보면,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우수인재가 676명이며, 다른 지역에서 대전시로 진학하는 학생이 28,723명임

<표 14> 대전시 고등학생의 대한 진학 성향(2007년)

| 대학생 | | 고등학생 진학현황 | | | | | | 부족 학생 (A-B) | 비진학 |
|-------------|-------------------------|--------------------|--------------------|-----|-------|--------------------|----------|-------------------|-------|
| 학 교 수 | 1학년 (전체) (A) | 고교 졸업생(6 0교) | 진학생 (진학율 90.1%) | | | | 계 (B) | | |
| | | | 자료공개 | | | 비공개 (전국+ 대전) | | | |
| | | | 충남대 | 수도권 | 소계 | | | | |
| 17 | 45,537 (149,080) | 18,856 | 1,290 (정원6,647) | 676 | 1,966 | 14,848 | 16,814 | 28,723 | 2,152 |

자료 : 대전교육통계, 언론보도

□ 파급효과

○ 우수인재의 수도권 소재 대학 유출 증가

- 수도권 대학 신설 및 정원증원은 곧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 증가
 - 수능상위 5%의 62.5% 서울소재 대학 진학
 - 서울소재 대학 입학자 100,100명의 48.8%(49,250명) 지방고교 출신자

○ 수도권 소재 학생의 지방 유입 감소

- 우리 지역은 비교적 수도권에 인접, 수도권 중하위권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 입학
-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상당수(약6~8%예측) 수도권 학생들이 지역대학에 유학 또는 통학, 규제 완화 시 수도권지역 유입 학생 급격 감소
- 2005년 4년제 대학생 140만명중[지방→서울: 12만여명(8.6%), 서울→지방: 8만여명(5.7%)]

○ 지방 대학의 정원 확보 곤란

- 학생수 감소로 일부 지역대학 존폐 문제 제기(수도권 대학: 100.1%, 비수도권대학: 96.1%, 수도권전문대: 99.3%, 비수도권전문대: 82.0%)

- 또한 장기적으로는 수험생 감소로 정원확보 더욱 곤란 예측
- 2011년을 기점으로 매년 학령아동 감소

<표 15> 년도별 학령아동(2006년)

(천명)

| 고등학교 | | | 중학교 | | | | 초등학교 | | | | |
|------|-----|-----|-----|-----|-----|-----|------|-----|-----|-----|-----|
| 3 | 2 | 1 | 3 | 2 | 1 | 6 | 5 | 4 | 3 | 2 | 1 |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573 | 595 | 607 | 683 | 702 | 689 | 679 | 680 | 659 | 650 | 621 | 601 |

자료 : 교육부

○ 지방 대학의 수도권 이전 촉발

- 지방대학에 대한 수도권 이전허용은 학생기근의 지방대학 수도권 진입 촉발
- 현 규제가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 인근(천안, 아산) 지역 대거 이전 경향
- 수도권 통학 가능 학생 확보용이 및 수도권 규제법 저축 회피 대안
- 서남대(전북 남원→ 아산캠퍼스 설립)
- 호남대(광주→ 천안 성환 부지확보), 대불대(목포), 영동대(충북) 이전구상

○ 지역경제·사회 위축

- 대학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사회 위축 예상(원룸, 인근상권 등)
- 또한 지방기업도 인재 채용어려움으로 지방이전
- 대학교 등 고등교육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순지방교육재원은 8,662억원
- 주거보증금으로 수도권에 묶이는 1조6천억원의 이자까지 합치면 순유출규모는 9,812억원으로 조사

4. 규제완화에 따른 대응방안

□ 합리적인 논리개발

- 지방대학의 역량 확보 전까지는 수도권의 대학규제완화에 반대
 - 수도권의 대학규제가 완화될 경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의 비중은 지금보다 더욱 커져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임
 - 특히 우수학생들의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더욱 가속화 될 것임
 - 현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내려오는 학생들의 비중은 매우 감소할 것임
 - 이와 같이 학생들의 과도한 중앙집중은 지방대학의 학생 수 부족, 학생의 질 저하 등과 같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고 이것은 지역의 인재 부족, 지역혁신 능력의 부족, 지역경제 침체와 같은 지역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됨

- 수도권의 대학규제 완화에 상응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수도권의 대학규제 완화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단순한 시장경제원리 및 국가경쟁력 논리가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는 국가 공간 전략으로 접근해야 함
 - 따라서 수도권 대학보다 자체역량이 부족하고 불리한 환경을 가진 지방대학에 대해서 수도권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 정부가 비수도권대학 육성특별회계 설치, 국가 예산의 일정비율 지방대 할당, 국가·공공기관·대기업의 일정 비율 지역인재 채용
 - 현재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누리사업)을 통해 특성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의 대폭적 확대, 일부 학과중심의 특성화를 벗어나 특성화 대학으로 집중 육성
 -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 및 재정 확충 자율성 부여, 통·폐합에 따른 이행조건 완화, 재정적 손실 보전

- 지방대학 기숙사·학생복지시설 등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민간사업자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지방대학 교육·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대학 정보화 적극 지원,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캠퍼스타운 조성에 국비의 적극적 지원

□ 중장기 인재육성 프로젝트 추진

○ 대전의 미래 인재상 정립

- 중장기 대전의 인재육성 비전을 설정
- 대전에서 태어나고 배출된 인재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일생을 통해 능력과 개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수립

○ 인생단계별(영유아-초등-중고등-대학-평생) 인재육성 실천 전략 수립

- 시교육청 및 대전발전연구원의 인적개발센터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인생단계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새로운 시대에 대응한 학습기회의 제공방안 연구

- 정보사회에 대응한 정보학습의 기회 제공
-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령복지의 실천
-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학습기회 제공
-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를 위한 학습기회 제공
- 국제화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이해력 학습
- 건전한 소비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학습기회의 제공

○ 산관학 연계에 의한 공동연구사업 추진방안 연구

- 연구개발이 중심이 되는 대학교수나 연구원들이 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겸업규제를 완화하는데 대전시의 역할 제고

IV. 결 론

-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발전의 위기이자 기회임
 - 수도권 규제완화는 대전지역의 입장에서는 위기이지만,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수반되면 지역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대전의 투자우수성 홍보 및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
 - 대전시 기업투자환경의 강점요인들을 크게 부각시키는 동시에 대전시 자체에서 육성·집적해야 할 산업분야를 명확히 하고 그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책(예컨대, 국가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하여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과 같은 추가적인 지원책 제시)이나 인프라를 정비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국내·외적으로 실시함
 - 타지역에 비해 연구개발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와 독자적인 R&D시설이 갖춰져 있는 대덕특구야말로 한국과학기술의 중심이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가 간 산업클러스터 허브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연구기관의 특구입주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서 많은 지원책과 인센티브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함

- 중·장기 사람(인재)육성 종합계획 홍보
 - 모든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개성과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학습도시의 이미지 제고
 - 학교교육의 발전과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대전시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신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
 - 대전시, 대학, 정부출연연구소가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여 과학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